

# 와다 하루키 "스가, 위안부 합의 때 아베 사죄 계승 확인해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19년 8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주최 제1회 학술회의 '한일관계, 반일과 혐한을 넘어서'에서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아베 2차 내각의 대한·대북한 관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9.8.26 jeong@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1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 표명을 계승한다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지식인인 와다 교수는 이날 오후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와다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나타니야 마사요시(那谷屋正義)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및 아베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과 '일본 정부 예산으로 마음의 상처 치유

조치 강구'를 스가 내각이 계승하는지를 묻는 질문주의서(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를 지난달 11일 정부에 제출했다.

스가 총리는 같은 달 25일 답변서를 통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로서는 이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와다 교수는 위안부 합의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 표명한 아베 총리의 사죄 및 상처 치유 조치를 계승하는지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자세라고 지적하면서 "합의를 지키는 입장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와다 교수는 또 한국 측이 기대하는 총리의 사죄 편지와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 치유재단의 남은 자금을 한국 정부가 만드는 '위안부문제연구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2.19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위안부) 합의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로, 로드맵의 성격을 가진다"며 "스가 내각은 이 합의를 계승한다고 재확인하고, 피해자의 마음에 와닿는 형태로 사죄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사죄 표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재원을 활용해 역사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세워 기억 계승 및 공유의 근거지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hojun@yna.co.kr